-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국제부
- 발 신 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단체 (22 개 단체)

(담당: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010-5574-8925, <u>khis21@hanmail.net</u>, 사단법인 아디 이동화 010-9947-9920, dh.lee@adians.net)

- 제 목 [보도자료] 로힝야 학살 7주기 미얀마 군부 규탄 기자회견 및 추모제 개최
- 날 짜 2024. 08. 23. (총 14 쪽)

보도자료

로힝야 학살 7주기 미얀마 군부 규탄 기자회견 및 희생자 추모 천도제 개최





- 1. 로힝야 학살 7주기를 맞아, 국제민주연대, 민변 국제연대위, 실천불교승가회, 아디, 참여연대, 해외주민연대 등 한국 시민사회 21개 단체는 주한 미얀마 대사관 인근에서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고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 2.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학살로 희생된 로힝야 인들에 대한 추모로 시작됐다. 첫번째 발언자로 나선 아디의 박상훈 대표는 최근 미얀마에 거주하는 로힝야 인들이 미얀마 군과 소수민족 무장 세력간의 교전에 갇혀 양측으로부터 학살되는 심각한 현실을 지적하며, 7년전과 지금의 학살의 책임이 미얀마 군부에 있지만 국제사회의 무기력한 대응으로 가해자 처벌이 되고 있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 3. 이어 실천불교승가회 여암 스님은 미얀마 로힝야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세계 평화도 가능하다고 언급하며 로힝야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국의 불교도 적극적으로 연대하겠다고 밝혔으며, 해외주민운동연대 강인남 대표 역시 로힝야

학살의 책임이 있는 미얀마 군부가 2021년 다시 쿠데타로 권력을 잡게 되자 미얀마 인들도 로힝야인 학살에 대해 미안함을 표시하였음을 언급하며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로힝야 학살의 진상규명을 위해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4. 이 기자회견에는 국내 거주 로힝야 난민인 파티마씨도 직접 참석하여 발언했다. 파티마씨는 "과거 로힝야인들과 미얀마인들이 오랫동안 서로 의지하며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미얀마 군부의 거짓 선동과 학살로 인하여 너무 많은 로힝야인들이 사망했고, 고향을 떠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또한 최근 미얀마군과 소수민족 무장세력의 공격으로 다시 7년전의 학살이 재현되고 있고 피난 도중 배가 뒤집혀 죽은 경우, 무장세력 공격으로 수십 명이 살해된 사례를 발언할 때는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 5. 또한 민변 국제연대위 한림세영 활동가는 최근 로힝야인들에 대한 학살이 심각해짐에도 국내외 언론보도는 줄어들고 있음을 지적하며 미얀마 군부의 즉각적인 퇴진을 위해 더 많은 국제사회의 관심이 필요함을 주문했다.
- 6. 마지막으로 22개 한국시민사회단체는 미얀마 군부의 로힝야 학살 책임 인정과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며,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에게 로힝야 난민의 안전한 귀환보장, 현재 지속되는 내전 중단과 민간인 대상 공격 중단,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조치를 촉구하였다. 기자회견 이후 참가들은 주한미얀마 대사관에 공동성명서를 전달했다.
- 7. 참가단체들은 이후 법장사로 장소를 옮겨 로힝야 학살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천도제를 진행하였다. 끝.

□ 기자회견 개요

• 제목:로힝야 학살 7주기 미얀마 군부 규탄 기자회견

일시·장소: 2024년 8월 23일(금) 오전 10시 30분, 주한 미얀마 대사관 인근
 일신빌딩(한남대로 98) 앞

• 주최: 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단체 (21개 단체)

• 프로그램

- 사회_나현필 /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 집단학살로 희생된 로힝야인들을 위한 추모
- 발언 1_박상훈 신부 / 사단법인 아디 대표
- 발언 2_여암 스님 / 실천불교승가회 사무처장
- 발언 3_강인남 대표 / 해외주민운동연대 대표
- 발언 4_파티마 이삭 / 한국 거주 로힝야 난민
- 발언 5_한림세영 활동가/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 기자회견문 낭독

□ 추모행사 개요

• 제목 : 로힝야 인종학살 희생자 극락왕생 발원 천도제

일시·장소: 2024년 8월 23일(금) 오후 2시, 서울시 중랑구 법장사(숙선옹주로 69)

• 주관:실천불교승가회

붙임1. 공동성명서 (국문)

로힝야 학살 7주기 한국 시민사회 공동성명서

오늘, 우리는 로힝야 학살 7주기를 맞아 다시금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7년 전, 미얀마 정부와 군부는 오랜 박해 끝에 로힝야인들 대상으로 집단학살을 자행했다. 이로 인해 로힝야족 수만 명이 학살당했고, 수십만 명이 고향을 잃고 난민이 되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끔찍한 반인륜 범죄에 대해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로힝야인들은 피해자 구제와 시민권을 보장하는 안전한 귀향을 보장받기는커녕 지연되는 정의 속에서 점차 잊혀지고 있다.

그 날의 비극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한국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무기력한 대응 속에서 오히려 되풀이되고 있다. 미얀마에 남아 있는 로힝야인들은 여전히 착취와 차별로 고통받고, 미얀마 군부와 라카인족 무장세력인 아라칸군(Arakan Army) 간의 내전이 격화되면서는 중화기까지 동원하는 양측의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극한의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이미 라카인 지역 부티다웅과 마웅도우 타운십에서만 로힝야족 민간인 수천 명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지 말고 보호하라는 국제인도법의 명백한 위반이다.

또한 미얀마 군부가 로힝야 강제징집을 통해 라카인과 로힝야 공동체 간의 불신, 공포, 증오를 조장하면서 아라칸군의 로힝야 대상 방화 공격, 무차별 총격, 참수 등 집단학살 증언까지도 나오고 있다. 몸을 피해 방글라데시로 피난하는 로힝야의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방글라데시 정부가 추가 난민 수용 불가능 입장과 함께 국경을 걸어 잠가 피난처를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 가까스로 캠프로 들어온 로힝야 피난민들은 난민 지위 인정과 인도 지원 접근이 불투명해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방글라데시로 피난한 로힝야 난민들 역시 난민캠프에서 극심한 인도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해마다 급격히 줄어드는 국제사회의 재정 지원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 시민권을 보장하는 귀환이나 재정착 기회 등 뚜렷한 대책이 없어 목숨을 걸고 위험한 항해에 나서는 로힝야 난민들의 수도 급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채, 로힝야 집단학살을 여전히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로힝야 난민들에 대한 시민권 보장과 안전한 귀환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피해 생존자들의 증언과 드러난 증거들은 이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이 미얀마 군부에 있음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다. 로힝야 난민들의 안전하고 존엄한 귀환은 미얀마 군부의 퇴진 없이는 불가능하다. 미얀마 군부는 즉각적인 권력 이양을 통해 로힝야인들의 시민권 보장과 안전하고 존엄한 귀환을 보장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2017년 집단학살에 대한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 피해자 구제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미얀마 군부와 아라칸군의 로힝야 대상 추가적인 만행을 막기 위해 내전의 즉각 중단과 민간인 공격, 로힝야 대상 집단학살에 대한 조사와 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로힝야 난민에 대한 인도지원 지속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한국 정부 역시 로힝야인들의 인도적 위기에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 우리는 로힝야 학살 이후에도 합작투자로 전쟁 범죄자와 이익을 도모한 한국 기업 문제를 사실상 방관하는 등 정부가 보여준 무책임한 태도에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 정부는 이를 깊이 성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향후 한국 기업의 미얀마 투자가 군부 운영 기업이나 로힝야족 인권 침해 상황에 연관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고, 관계가 확인된 경우에는 제재와 철수 등 철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로힝야 난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로힝야인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연대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시민사회는 로힝야 학살 7주기를 맞아 집단 학살 피해자들을 추모함과 동시에 미얀마 군부와 아라칸군이 로힝야족을 대상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자행하는 반인도범죄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로힝야인들의 인권이 회복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연대할 것을 다짐하며 미얀마 정부와 국제사회 그리고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미얀마 군부는 로힝야 학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라.

하나,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 난민에 대한 시민권을 보장하는 안전한 귀환과 정착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라.

하나, 국제사회는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 피해자 구제에 속도를 내는 한편, 양측의 내전 중단과 모든 민간인 대상 공격 즉각 중지, 아라칸군의 집단학살에 대한 조사와 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

하나, 국제사회는 방글라데시 캠프와 라카인주의 로힝야족에 대한 식량, 의료 등 인도지원 보장하라.

하나, 한국 정부는 미얀마 군부와 협력하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철저한 조치를 취하고, 로힝야 인도적 위기 상황에 대한 지원을 적극 확대하라.

2024년 8월 23일 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

경북북부 이주노동자센터 / 공익법센터 어필 / 국제민주연대 / 난민인권센터 다른세상을향한연대 / 무악동선교본당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 사단법인 아디 / 사단법인 오픈넷 /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 성 프란치스코 평화센 / 생명안전 시민넷 /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승가회 /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 이주노동자센터 이웃살이 (사)제주다크투어 / 제주평화인권센터 /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참여연대 / 피스모모 / 해외주민운동연대 (22개 단체)

붙임2. 공동성명서 (영문)

Joint Statement by South Korean Civil Society on the 7th Rohingya Genocide Rememberance Day

Today, we stand here once again with heavy hearts on the 7th Rohingya Genocide Rememberance Day. Seven years ago, the Myanmar military junta committed genocide against the Rohingya people after a long period of persecution. As a result, tens of thousands of Rohingya were massacred, and hundreds of thousands were displaced from their homes and became refugees. Yet, even after seven years, no one has been held accountable for this atrocious crime against humanity. Far from receiving redress as victims and a safe return home with guaranteed citizenship, the Rohingya people are gradually being forgotten in the face of a delayed justice.

The tragedy of that day is far from over. In fact, it is being repeated under the apathetic respons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South Korean government. Rohingya people remaining in Myanmar continue to suffer from exploitation and discrimination, and as the civil war between the Myanmar military junta and the Arakan army, an armed Rakhine ethnic group, intensifies, they are being pushed to the brink by indiscriminate attacks from both sides, now involving heavy weaponry. It is estimated that thousands of Rohingya civilians have already been killed or injured in the Buthidaung and Maungdaw townships of the Rakhine State. This is a blatant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hich mandates that civilians must be protected, not targeted.

Furthermore, testimonies of genocide, including arson, indiscriminate shootings, and beheadings of Rohingya by the Arakan army, have emerged as the Myanmar junta's forced conscription of Rohingya has fueled mistrust, fear, and hatred between the Rakhine and Rohingya communities. While the number of Rohingya fleeing to Bangladesh for safety is increasing, they are unable to find refuge due to the Bangladesh government's refusal to accept additional refugees and the closure of the border. Rohingya refugees who have barely made it into the camps are facing uncertainty regarding their refugee status and access to humanitarian aid, which puts their survival at risk.

Rohingya refugees who have fled to Bangladesh are also facing a severe humanitarian crisis in the refugee camps. They are struggling to survive in harsh conditions due to the rapidly decreasing financial suppor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ach year. With no clear solutions, such as guaranteed citizenship upon return or resettlement opportunities, the number of Rohingya refugees risking their lives on dangerous voyages has skyrocketed.

Nevertheless, the Myanmar military junta, which seized power through a coup, continues to deny the Rohingya genocide and evade accountability. It has also failed to provide Rohingya refugees with guaranteed citizenship and safe return. The testimonies of survivors and the evidence that has surfaced clearly demonstrate that the Myanmar junta is responsible for this crime against humanity. The safe and dignified return of Rohingya refugees is not possible without the resignation of the Myanmar military junta. The military must immediately hand over power and ensure citizenship and a safe and dignified return for the Rohingya.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accelerate efforts to investigate the truth of the 2017 Rohingya genocide, criminally prosecute perpetrators, and provide redress for the victims. At the same time, it must take strong measures to prevent further atrocities against the Rohingya by the Myanmar military junta and the Arakan army, including an immediate cessation of the civil war, and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regarding attacks on civilians and genocide against the Rohingya. Additionally, every effort must be made to secure the necessary resources to continue humanitarian assistance for Rohingya refuge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also respond to the Rohingya humanitarian crisis more responsibly. We are deeply concerned about the government's irresponsible behavior in the aftermath of the Rohingya genocide, including its de facto acquiescence to South Korean companies seeking profit from joint ventures with war criminals. The government should reflect deeply on the situation and prevent recurrence by taking thorough measures, including sanctions and withdrawals, to ensure that future South Korean investments in Myanmar are not linked to military-run enterprises or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the Rohingya. In addition, it should expand support for Rohingya refugees and actively empathize with and stand in solidarity with their suffering.

On the 7th anniversary of the Rohingya genocide, South Korean civil society commemorates the victims of the genocide and refuses to turn a blind eye to the ongoing crime against humanity perpetrated by the Myanmar military junta and the Arakan army against the Rohingya. We pledge to continue to stand in solidarity until the human rights of the

Rohingya and democracy are restored in Myanmar, and we demand the following actions from the Myanmar junta,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 The Myanmar military junta must acknowledge responsibility for the Rohingya genocide and immediately step down from power.
- The Myanmar military junta must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e safe return with guaranteed citizenship and resettlement of Rohingya refugees.
-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accelerate efforts to investigate the truth, criminally prosecute perpetrators, and provide redress to victims, while taking strong measures to end the civil war, halt all attacks on civilians, and investigate and prosecute the perpetrators of genocide by the Arakan army.
-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guarantee humanitarian aid, including food and medical assistance, to Rohingya refugees in Bangladesh camps and Rakhine State.
-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take thorough actions against South Korean companies collaborating with the Myanmar junta, and actively expand support for the Rohingya humanitarian crisis.

August 23rd, 2024

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 / Asian Dignity Initiative / Civilian Military Watch
Gyeongbuk Bukbu Migrant Worker Center / Incorporated Organization Shilcheon Bulgyo
Jeju Dark Tour / JejuPeaceHumanrightsCenter / Jesuit Migrant Workers Center - Yiutsari
Jesuit Research Center for Advocacy and Solidarity / KOCO
LIFE & SAFETY NETWORK /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MINBYUN -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International Solidarity Committee /
MUAk-DONG MISSION PARISH / NANCEN Refugee Rights Center
New Bodhisattva Network / Open Net Korea / PEACEMOMO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PSPD)
Solidarity for Another World / St. Francis Peace Center Foundation

붙임3. 기자회견 사진



▲ 발언 중인 한국 거주 로힝야 난민 파티마 이삭



▲ 로힝야 학살 **7**주기 한국 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서를 미얀마 대사관에 전달하는 사단법인 아디의 박상훈 대표와 실천불교승가회의 여암 스님.



▲ 로힝야 학살 **7**주기 한국 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서를 미얀마 대사관에 전달하는 사단법인 아디의 박상훈 대표와 실천불교승가회의 여암 스님. (2)



▲ 로힝야 학살 **7**주기 한국 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서를 전하기 위해 미얀마 대사관 건물 앞으로 향하는 사단법인 아디의 박상훈 대표와 실천불교승가회의 여암 스님.



▲ 기자회견문 낭독.



▲ 구호를 외치는 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



▲ 학살 희생자 추모를 위한 묵념 시간.



▲ 연대 발언 중인 사단법인 아디 박상훈 대표.



▲ 연대 발언 중인 해외주민운동연대 강인남 대표



▲ 연대 발언 중인 실천불교승가회 여암 스님.